"北 핵보유국 인정할 수 없다" 재확인

■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무슨 얘기 나눴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한 목소리 견지"

한미 양국은 7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또 '언론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합의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관련 문제와 회담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두 차관은 이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두 차관은 "최근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특히 "한미 동맹관계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굳건하게 발전해 왔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 세계적인 대 테러전,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 양국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두 차관은 말했다.

양국은 향후 장관급 전략대화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론발표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급물살 타는 외환銀 헐값매각 수사

이강원·론스타 합작?

검찰, 불법공모 가능성 초점…금융당국 로비도 추적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경영진이 은행 매각 · 매입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매수인 입장에서 외환은행을 위해 여러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 액션이 불법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공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론스타의 협상대표였던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전 유임약속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15억원의 성과급과 고문료를 받은 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론스타나 외환은행 경영진이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당국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팩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으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본질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일반 형법상의 성격을 따진다면 사기에 가깝다. 업무상 배임이라면 피해자는 회사겠지만 회사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7일 새벽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19억8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 수감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군비 유입 안될 것"

北 회사가 생필품 수입해 배급…한국인 무역상 밝혀

통일부 2년간 실체 파악못하다 제보 받고서야 확인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생필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외국에서 생필품을 수입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한국계 호주인 송용등(66)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개성시 인민위원회 산하의 송악산무역회사와 51대 49의 비율로 합영회사 '고려상업합영회사'를 작년 1월 설립, 쌀과 밀가루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120여 품목을 수입해 개성 시내 백화점 및 보급소를 통해 공단 근로자들에게 배급하고 있다. 고려상업합영회사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건네받아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 임금(평균 59달러, 사회보험료 8달러 제외)을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거쳐 세금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총임금의 30%)를 뗀 금액의 대부분을 북측 은행의 고려상업합영회사 계좌에 입금한다. 고려상업합영회사는 이 돈으로 생필품을 수입하고 공단 노동자들은 총국에서 받은 구매가능 액수가 적힌 명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한다는 게 통일부가 송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이 배급표와 북한 원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현금 흐름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송씨가 북측에서 받은 영업허가증과 구체적 장부를 제시한 점에 비춰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이같은 임금 지급 체계를 갖춘 지 2년이 다 되도록 통일부가 지금까지 구체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北 봉화산호에 군사 장비 없어"

미얀마 정부는 7일 '무기선적 의혹'을 받아온 북한 선적 '봉화산호'에 승선, 점검을 했으나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무기 등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미얀마 항만청은 이날 주한 미얀마 대사관 측을 통해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봉화산호가 지난 4일 구원 요청을 해와 4일 오후 1시께(현지시각) 양곤의 틸라와항에 긴급 정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얀마 항만청은 긴급 상황에서 인도적 배려를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에 따라 봉화산호의 요청을 받은 대로 식수와 연료 등을 보충하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항만청은 또 봉화산호가 6일 0시께 틸라와항을 출발했으며 6일 새벽 3시50분께 미얀마 영해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봉화산호에는 총 32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항만청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광주·전남 갈등 또 싹트나

홍행기
사회2부 차장

당연한 얘기지만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다. 전라남도가 창설된 것은 지난 1896년 8월이다. 당시 광주에 도청이 설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와 전남은 최소한 110년 전부터 한 뿌리였던 셈이다. 구태여 역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다수 시·도민의 의식 속에선 아직도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

그러나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전라남도와 분리되고, 행정기관인 도청과 시청이 생기면서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는 의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로 잘살아보겠다는 선의의 경쟁에서 빚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민선 단체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기야 진흙탕을 구르며 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됐다.

4~5년 전 서로 경륜장을 유치하겠다며 핏대를 올리다 결국 모두 무산됐던 것을 비롯해 광주 광산업 엑스포와 여수 해양엑스포를 두고 경쟁했던 일, 정부종합청사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반목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은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던 시·도는 지난해 공공혁신도시 건설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모습을 내외에 과시하고 박수를 받았다. 시장과 지사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돈독한 협력의 발언과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 슬슬 반목의 조짐이 되살아나고 있다. 첫 사례는 전남도가 만들었다. 지난 7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민선 4기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국제규모의 전남컨벤션센터(JEXCO)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광주시가 호남 최대규모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상무지구에 건립해 놓은 상태에서 발표된 전남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곧바로 '중복·과잉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도간 갈등에 불을 붙였다.

강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를 향해 두 번째 시위를 당겼다. 남악신도시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남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남종화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겠다는 배경설명을 내놨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혀 '한 뿌리인'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광주시와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한다면 전남발전을 위한 계획은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남도 관계자의 답변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redplane@kwangju.co.kr